

정후식 칼럼



논설실장·이사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라는 말이 있다.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전치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 제나라 선왕이 정치에 대해 묻자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왕도(王道)는 자연스레 열린다'며 민본주의 사상이 맹자가 들려준 경구다. 맹자는 나아가 백성이 바른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일탈에 빠지기 쉬운데 그들이 죄를 범한 뒤에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백성을 그물질(罔民)하는 것과 같다고 충고했다.

2300여 년 전 맹자가 말한 항산(恒産)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생계를 유지할 만한 생업(生業)을 말함이 아니었을까. 요즘 시대적 화두가 된 '일자리' 말이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받는 증표다. 하지만 부족한 일자리는 되레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 취업이 안 되니 연애나 결혼은 언급생심 업무도 못 내고, 결혼을 하지 못하니 아이도 낳을 수 없다.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도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꿈과 희망이 싹틀 리 없다. 포기해야 할 게 너무 많은 'N포 세대'의 비극이다. '촛불 시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헤쳐 나가기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제로 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원장을 맡았다.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고 수십 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실업률은 3.8%로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체감 실업률도 22.8%까지 치솟았다. 고용 지표가 부진을 거듭하면서 급기야 '일자리 쇼크' '고용 참사'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였다.

청년들을 그물질하는 사회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광주형 일자리'는 이처럼 일자리가 무너지는 비상 상황에서,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고용을 늘려 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방식도 획기적이었다.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기업은 경쟁력을 키우고, 노동자에게는 고용 안정과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모델이었다. 출발점은 민선 6기인 2014년 운장현 시장의 공약이었다. 당시 광주에서는 부족한 일자리 때문에 매년 수천 명의 청년들이 수도권 등지로 '취업 유랑'을 떠나는 상황이었다. 지역 차원의 구상은 3년 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국가적 어젠다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현대자동차가 투자 의향을 제출하며 급물살을 타기도 했다. 사업 구상은 광주시와 현대차가 공동 투자해 빛그린 산업단지에 완성차 공장을 짓고, 근로자 1000여 명을 고용해 연간 10만 대의 경형 SUV를 생산하겠다는 것이었다. 직간접 고용 효과는 협력업체를 포함 1만 2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지역 노동계가 임금 수준 등의 불투명함을 이유로 위원회에서 탈퇴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등 여여곡절을 겪었

다. 진통 끝에 지역 노동계는 지난해 11월 말 광주시에 협상 전권을 위임했고 시와 현대차는 합작법인 설립안에 잠정 합의했다. 근로 시간과 초임 연봉은 주 44시간에 3500만 원으로 잡았다. 기존 현대차 조봉에 비해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부와 광주시가 주택·교육·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 임금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해 4월에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의공 결의까지 나와 4년여 만에 결실을 거두는 듯 했다. 광주시 직전에 발목을 잡은 것은 노사민정이 의결 과정에서 '신설 법인의 임금 협상'을 생산 목표 대수 35만 대 달성 때까지 유예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한 것이었다. 현대차는 수정안을 거부했고 협상은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 사실 '광주형 일자리'는 역대 정권의 차별과 소외 정책에 따른 산업 기반 취약으로 섬처럼 고립돼 온 광주가, 청년들에게 미래를 열어 주기 위해 마련한 자생의 길이라 할 수 있다. 그 바탕엔 나눔과 연대, 대동(大同)의 '광주 정신'이 깔려 있다. 국내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시도는 그렇게 잉태됐고 이를 지방 정부와 지역 사회가 주도한 점은 더욱 의미가 있다 하겠다. 슬한 이견과 갈등이 있었지만 임금 협상 유예 조항을 제외한 적정 임금, 적정 근로 시간, 원·하청 개선, 노사 책임 경영 등 4대 원칙이 합의를 이룬 것도 이런 공감대가 원동력이 됐을 것이다. 광주시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설득, 지역 노동계의 통 큰 양보, 22년 만의 국내 투자자는 현대차의 의지가 없었다면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협상 주체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제 딱 하나의 관문만 남았다. 임금 협상 유예는 노사가 역사사지로서 소통하고 절충하면 조율이 가능한 사안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본보기가 된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Auto) 5000' 성사 과정도 결코 순탄치는 않았다. 노사는 협상 과정에서 충돌을 거듭했고 급기야 결렬 선언이 나오기도 했다. 양측을 중재한 것은 당시 총리였던 게르하르트 슈뢰더였다. 광주형 일자리 역시 중앙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 지역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라고 했다. '노사가 지혜를 모아 주변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광주시 역시 '노사 상생 도시'를 선언하며 현대차 및 지역 노동계와 협상을 재개했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의 해로

저성장이 고착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선택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그 실험의 중심에 광주형 일자리가 있다. 한 번도 보지 않은 낮설고 힘든 길이지만, 성공하면 대한민국 일자리와 노사 관계 패러다임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중대 기로다. 노사민정이 다시 한 번 신뢰를 써실로 상생을 낚실로 삼아, '광주형 일자리'라는 하나의 희망을 함께 엮어 나가야 한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더 이상 절망의 그늘에 갇혀 헤매지 않도록. /who@kwangju.co.kr

社說

'노사 상생 도시' 구체적 실천 노력 뒤따라야

민선 7기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노사 상생 도시'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옛그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 노사 상생 도시 광주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이날 회견에는 답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해 12월 현대차와의 협약 체결 조인식이 무산된 뒤 아직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상 팀을 재정비한 광주시는 최근 현대차와 지역노동계를 상대로 협상을 재개동하는 한편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다행히 새해 들어 정부는 부쩍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이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성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선언하며 현대차 및 지역 노동계와 협상을 재개했다.

그러나 '노사 상생 도시'를 선언하고 나서도 구체적인 실천 노력의 여파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노사 상생 도시 선언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선언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사 상생은 좀처럼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의 적정 이윤과 노동자의 노동 가치에 대한 적정 보상을 바라는 관점이 서로 다른 가운데 이를 중재·조율할 만큼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노사 상생을 위해 노동계와 기업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중간 지대'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선언도 좋고 태스크포스도 좋지만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한 광주시의 진정 어린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광주형 미세먼지 대책' 마련할 수는 없나

연초부터 최악의 미세먼지가 나를 연속 광주 전역을 뒤덮으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내렸다. 특히 어제 낮 12시 기준 광주의 초미세먼지(PM2.5) 시간 평균 농도는 133㎍/㎥로 2015년 환경부 공식 측정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지난 12일 밤 발효된 이후 이날까지 광주에서는 시간 평균 농도가 위험 수준인 75㎍/㎥ 이상 유지됐다. 주의보가 내려지자 광주시는 그제와 어제 이를 동안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고 차량 2부제 시행, 도로 청소 확대, 자동차 공회전 단속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차량 2부제 등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광주일보 취재 팀이 그제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광주시청에서 민원인 주차장을 향하는 차량을 지켜본 결과 61대 중 36대가 운행 자체 대

신안 출수 번호 차량이었다. 대다수 운전자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지조차 몰랐다. 광주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농도를 2030년까지 16%, 초미세먼지는 21%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미세먼지는 갈수록 악화하는 양상이다. 일상이 되어 버린 미세먼지에 시민들은 외출은 물론 습기조차 어렵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공공 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선 시민들의 협조와 고등분담이 필수적이다.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실태 조사와 배출가스 과다 차량 운행 제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도 절실한데, 지역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은펜칼럼



류 동 훈 더하기지구운영협의회 사무국장

은 세상이 답답하게 부엌다. 미세먼지가 뒤덮어 숨쉬기가 힘들다. 새벽에 출근하기 전 잠자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많이 미안했다. 조상들이 수천년 동안 살기 좋게 물려준 지구를 최근 100년 동안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잘살아보겠다는 욕망으로 인간들이 의기투합한 결과 결국 후손들에게 숨쉬기도 힘든 지구를 물려주게 되었다. 더 답답한 것은 이런 현상이 점점 더 심해 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바다에서는 플라스틱을 뱉속 가득 품고 죽어가는 물고기들이 올라오고, 들판에서는 농약 때문에 개구리를 찾아보기 힘들다. 자연 환경 뿐만 아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온 가족이 함께 어울려 살

'오래된 미래'에 희망이 있다

면서 아이를 형제 자매들이 돌봐주고, 이웃이 함께 돌본다. 가족이 따뜻한 밥을 지어 저녁을 같이 먹고, 아기가 나누다 잠들었다. 저 세상 갈때도 마을 주민들이 꽃상여를 메서 저승 가는 길을 함께 해주었다. 갓난아이를 나오면 엄마는 젖을 먹이면서 품에서 키웠고, 마당에서는 닭이 뛰어다니며 모이를 주먹먹고 신선한 계란을 낳아서 우리에게 주었다. 산에서는 소를 풀어 키웠고, 그 소는 또 들판에서 쟁기를 갈아주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옛날 이야기들 하는 걸까? 인류는 빨리 그리고, 멀리가기 위해 자동차를 발명하였고, 그 자동차를 사기 위해 열심히 일했으며, 그래서 빨리 멀리가게 되었다. 아니, 빨리 멀리가야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 석유를 태웠고, 매연은 다시 지구 온난화를 일으켜 여름철 폭염과 기상이변으로 돌아오고, 미세먼지를 만들었다. 이 온난화는 사막화도 불러와서 미세먼지를 만들고 있다. 또, 멀리 갈수 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 너도 나도 멀리 다니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게 되고, 학교와 직장을

찾아서 멀리 떠나다 보니 가족공동체들은 차근차근 붕괴되어 버렸다. 멀리 출세하기 좋은 학교를 찾아가기 위해 그 곳다운 청소년 시절을 책상에 파묻혀 입시 경쟁에 보내고 있다. 도시로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은 아파 트리는 주거 공간을 개발하게 되었고, 평생 일해서 아파트 한 채 장만하고, 아름다운 지구와 이별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결국 돌이 결혼해 1명도 낳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은 후손들이 살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을 본능적으로 예감하고, 후손을 아예 안 낳아 버리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청년들은 생존의 경쟁에서 지쳐 취업업을 포기하고, 아예 결혼도 포기해 가고 있다. 이제는 앞만 보고 있는 우리의 미래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지난 사천년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과 더불어 인류의 생존을 지속시켜 왔던 조상들이 더 현명했었던 것 같다. 들에서 농사짓고 살던 그 시절에는 스무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했으며, 아이들도 셋, 넷을 낳으며 더 풍성하게 살았고, 저승가는 길도 그렇게 쓸

을하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도시를 벗어나 시골로 들어가 덜 밟고, 덜 쓰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며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생활을 연구해 보아야 한다. 국가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의 시대적 난제를 도시 안에서만 풀려고 하지 말고, 농촌에서 그 해법을 찾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당장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에서 할 일들을 찾아가기 힘들던 도시 근교 농촌에서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다. 사천년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DNA는 다시 흙과 자연 속에서 경작을 할 때 결핍을 극복하고 치유를 맞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첨단 산업을 개발하여 치열한 경쟁 구도로 살아가는 그 정성 그 자원을 조금만 방향을 틀어 농촌으로 돌리고, 살아가는 방식의 철학의 발상의 전환을 이루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자연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인간사회에 다시 활력을 주어 일으켜 세울 것이다. 농촌 공동체로 다시 모인다면 인류는 다시 사천년의 역사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이다.

기 고

누가 찬란한 역사를 훼손하려 하는가



이지현 5·18 부상자동지회 초대회장·연극인

지난 14일 새벽을 깨우며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5·18 유가족과 부상자, 구속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자유한국당에 5·18 민주화운동 조사위원의 빠른 추천으로 진상 규명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는 사이에 미뤄 온 조사위원을 추천했다는 소식에 안도하며 자유한국당 앞 농성을 양보(?)하고 연회동으로 향했다. 자주 들리는 곳이지만 이번 항의 방문

은 의미가 있었다. 전두환을 '민주주의의 아버지'로 미화시킨 이순자의 망언이 나온 뒤였기 때문이다. 전두환 부부의 집 앞에서 한 맺힌 5월 가족들은 외쳤다. "국민들의 명령이다 전두환은 재판에 출석하라" "광주 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사죄하라" 대답이 없다. 집회를 정리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해 부르는 5월 가족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잊을 수 없다. 오랜 산고 끝에 태어난 자식이라 건강하고 믿음직한 옥동자가 탄생했을 거라는 국민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깨졌다. 보수 논객 지만원 씨를 추천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한국당이 추천한 인물들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으며, 진상 규명이란 대명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면면들이다. 더욱 가관스러운 것은, 한국당이 권태오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동욱 전

조선일보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을 추천하면서 내놓은 논평이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균형 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책임자"라는 자화자찬이다. 1988년 5공 청문회가 열릴 때도 죽은 사람은 많은데 쓰라고 시킨 사람은 없어서 청문회 무용론까지 등장했던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음모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다. 여론이 무섭다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추천하든지, 아예 포기하는 게 역사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언론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지면 대통령께서 임명하겠지만 참모로 통탄할 일이다. 죽음의 공포를 뚫고 80년 5월 27일 새벽을 지킨 영령들

이 편히 잠들 수 있는 소박한 꿈마저 훼손을 놓아야 속이 후련하다는 말인가? 39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몇 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고 남북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열망이 솟구치고 있지만 삶의 질과 인권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기나긴 역경 속에서 변한 게 있다면 80년 당시 열기 왕성했던 20대는 중장년이 되고, 자식과 남편을 뺀 거 어머니들은 서서히 늙고 죽어간다는 슬픈 현실. 5월 가족과 시민들도 상경 투쟁을 끝내고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은 소망이 왜 없겠는가? 그래서 부탁한다. 우리의 슬픔을 희망으로 보듬어 주진 못할망정 짐을 뺐지는 말아 달라고. 역사의 시계를 멈추게 하려는 자들이여, 더 이상 5월 광주의 송고함을 오염시키려 하지 말라. 누가 찬란한 역사를 훼손하려 하는가?

無等鼓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93년 1월, 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소환됐다. 당시 국민당 대표였던 정 회장은 경쟁 후보 지지자들의 대화 내용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정 회장이 출두하자 순식간에 기자들과 현대그룹 관계자 등이 뒤엉켰다. 이 과정에서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맞아 정 회장의 이마가 찢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무질서한 취재 현장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기자회견이 포토 라인을 제정됐다. 포토 라인은 피의자가 소환될 때 잠시 멈춰 설 수 있도록 수사

에 세우는 예가 거의 없다. 얼마 전 일본 경제계 거물인 نيسان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회장이 구속됐는데도 관련 사진이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미국이나 독일도 피의자가 원하지 않으면 촬영을 허용하지 않는다. 며칠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에 출두하면서 포토 라인을 그냥 지나쳤다. 이를 계기로 포토 라인 필요성을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상징이자 수감시 효과가 있다는 찬성론에 맞서 반대론자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낙인 찍

포토 라인

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에선 보이스포싱 사기를 당한 윤장현 전 시장의 출두를 대비한 포토 라인은 마련하지 않았지만 사자명예훼손 혐의의 알 권리는 논리에 의해 관행적으로 운영돼 왔다. 1995년 노태우·전두환, 2000년 고 노무현, 2017년 박근혜, 2018년 이명박까지 5명의 전직 대통령이 포토 라인에 섰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포토 라인 앞에는 성적이 없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에선 피의자를 포토 라인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address, and subscription rates.